

서울우유, 거창공장 준공...세계 최첨단 친환경 공장 '주목'

경남 거창군의 청정지역에 건설된 서울우유 거창공장이 지난 6일 준공식을 갖고 세계적 품질의 청정우유 시대를 개막했다. 이날 준공식은 김태호 경남도지사 등 9백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서울우유 거창공장은 서울우유 68년 역사가 탄생시킨 세계 제 1의 최첨단·친환경·고효율·청정우유 공장으로 1천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3만1천여평에 이르는 청정지역에 조성되어 가장 깨끗한 곳에서 가장 좋은 시설로 제일 좋은 우유를 만든다는 자부심과 대한민국 1등 우유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고취했다. 공장 설계는 3H(High Sanitation, High Automation, Highly Compact)를 바탕으로 HACCP기준(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을 고려한 청정설비와 최신 자동화 시설을 갖추어 고품질의 제품 생산과 더불어 생산효율성까지 극대화했다고 한다.

또한 생산에서 보관, 출하를 위한 최첨단 물류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생산과정 전 부문에 걸친 첨단화가 주목된다. 이로써 서울우유는 시장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원유 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최신 생산시설 확보에 따른 원가절감과 위생적인 제품생산으로 고품질의 제품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지 공장 건설로 판매 권역별 균형적인 공급 능력 및 제품 신선도를 확보하게 되었다. 낙농업계의 관심거리로 제기되고 있는 거창공장의 하루처리 원유량은 하루평균 약 5백톤으로 이는 우유 2백50만개에 해당하는 물량이며, 지난 9월초 원유품질 최고등급인 1급A로 새롭게 탄생된 백색시유를 주력으로 생산하게 된다.

(축산신문 10월 6일자)

가축 항생제 사용 매년 감소세

농림부는 지난 10월 4일 참여연대의 항생제 사용 지적과 관련, 앞으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배합사료에 대한 혼합 가능 항생제 종류의 지속적인 감축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그동안 항생제 과다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가축사육환경개선, 배합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항생제 종류 축소 등을 추진해 오며 따라 최근 3년간 항생제



사용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항생제 사용량이 2001년 1천5백95톤에서 2002년 1천5백41톤, 2003년 1천4백38톤, 2004년 1천3백34톤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중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제는 43%, 농가자가배합 49%, 동물병원 판매 8%로 나타났다. 항생제 내성률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한국이 90.2%, 스페인 91%, 벨기에 79.7%, 프랑스 89%, 캐나다 81.9%, 영국 78.4%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잔류위반율 0.25%(소 0.39%, 돼지 0.29%)로 미국 0.73%(소 0.77%, 돼지 0.31%)보다도 낮은 수준인데 비해 영국 0.24%(소 0.20%, 돼지 0.1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적정 가축사육 밀도 유지를 위한 축산업등록제 시행, 사육환경개선, 축사설계 방법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가축사육단계에서의 HACCP(돼지 2006년, 젓소와 한우 2007년, 산란계와 육계는 2009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배합사료에 혼합가능한 항생제 종류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항생제 사용절감 연구모임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생균제·면역증강물질 등 항생제 대체물질도 개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축산신문 10월 6일자)

축산물 수입관세 전액 축발기금 자원 충당율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면서 축발기금 조성액이 줄어들자 앞으로 축산분야 지원에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축산물 수입 관세 전액을 축발기금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여론이 또 다시 비등해지고 있다.

특히 축산분야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DDA/FTA 협상 결과가 몰고 올 파장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법제화를 통해 축산분야에 축산물 수입관세 전액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축산신문 10월 8일자)

박홍수 농림장관 국감시, “농협개혁 농민실익 초점” 밝혀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10월 11일 “농협개혁은 신·경분리를 위한 전제 아래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과연 농민에게 어떻게 하면 실익이 되도록 하는가에 맞춰 준비하고 있음”을 밝혀 신경분리에서 한발 후퇴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박 장관은 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정 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상황실을 마련,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농림부

를 비롯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신중식의원과 안병엽의원, 김형오의원, 김낙성의원, 이정일의원 등 여야의원들의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박 장관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철새가 날아오는 3개월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 예방 우선으로 물샐틈없는 방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홍문표의원의 수입돼지고기에서 항생·항균제 다량 검출된 데 따른 대응이 미흡하다고 한 지적과 관련, “수입 돼지고기는 모두 수입 통관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선검사 후통관’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검사중에 있거나 불합격된 축산물이 국내에 공급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는 다이옥신이나 병원성미생물 등 위해가 큰 경우에만 대외적인 발표를 했지만 앞으로는 항생·항균제 등 잔류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조일현의원은 농림부와 농협이 농협의 신경분리를 위한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물으면서 경제사업 70%, 신용사업 30%의 구조가 가장 바람직한 모

습임을 강조하는 한편 농축협의 진정한 화학적 통합을 통해 축산과 농업이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기갑의원은 축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되게 한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농림부에서 이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축산신문 10월 12일자)

한우가격 연말 연초 높고 3~5월 낮아

쇠고기 수입이 자유화된 2000년대 들어 한우 산지가격이 연말 연초(11~1월)에 높고 봄철(3~5월)에 낮은 가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1980~1990년대와는 다른 패턴으로 한우고기의 고급육화 및 고가화로 봄과 여름에 소비가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양대 명절인 설과 추석에 소비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정진국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축산서기관이 지난 10월 10일 발표한 '한우 값의 계절성 분석'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한우가격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봄철로 한우가격이 낮은 시기가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 서기관은 이에 따라 비육농가들은 양대 명절과 연말연초 출하를 늘리기 위해 송아지 구입은 8~10월과

12~2월이 좋으며 거세 비육기간은 22~24개월로 조정하는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번식농가들은 비육우를 다량 출하한 후 송아지 구입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인공수정 시기를 6~8월과 10~12월로 집중시키는 계절 번식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수축산신문 10월 13일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범정부 대응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월 14일 오전 관계부처 1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국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민관협의체'를 구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관계부처 장관과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민간 전문위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예방활동과 방역대책, 부처 간 협조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산하에는 국무조정실 정책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이 방역대책 관련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검역원은 지난 14일자로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보를 발령, 양계농가 등 조류 관련 사육농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축산신문 10월 17일자)

국회 농해수위원장에 이상배 의원 선출



이상배 의원(한나라, 경북 상주)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5·31 지방선거에서 경북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김광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이상배 의원을 선출했다.

신임 이 위원장은 경기교와 서울 법대를 나와 경북도지사, 환경청장, 내부무차관, 총무처장관, 서울시장 등을 역임한 3선(15·16·17)의원이다.

(축산신문 10월 24일자)

'한국형 보증종모우' 딸 소 첫 '챔피언'

한국형 보증젖소종모우 딸 소가 국내 처음으로 2005 한국홀스타인 품평회에서 그랜드 챔피언을 수상했다. 최근 농협 젖소개량부(부장 이희철)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13일 양일간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열린 품평회에서 한국형 보증종모우 H-948 제주의 딸 소인 '새벽 제주도 87호'가 그랜드 챔피언을 수상하여 앞으로 한국형 보증종모우에 대한 평가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젖소는 새벽목장(대표:

박승대)에서 번식하고 출품한 젖소로 지난 6월에 열린 서울유우홀스타인 경진대회에서 준 주니어 챔피언을 차지한 새벽 제주도 라울113호의 어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초산우로 305일 보정 실제 유량이 9천6백22Kg으로 생산능력이 우수하고, 외모 또한 훌륭한 것으로 평가되어 11부 최우수·11부 황금유방상·시니어 챔피언을 포함, 4관왕을 차지했다.

(축산신문 10월 24일자)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논의 '전전공공'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가축방역협의회회의 개최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가축방역협의회회의 개최시기가 맞물려 있어 미국측 압력으로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를 논의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 농림부 관계자는 "11월중 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공교롭게도 APEC정상회의와 겹쳐 있어 개최시기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의 고민은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어느 때 협의회를 열더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정상회의 이전에 협의회를 개최하면 한미간 최대 통상현안인

쇠고기 문제를 부시 대통령 방한전에 해결하려 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정상회의가 끝난 뒤 개최해도 한미간 '물밑협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억측을 낳을 수 있다는 것. 또 최근 납 김치 파동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것도 농림부에는 부담이 된다. 때문에 농림부는 "국민 식생활안전과 관련된 사안이 통상압력에 의해 좌우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문화일보 10월 25일자)

소 수집·중개상 농장-브루셀라 감염률 높다

소 수집상과 중개상들의 사육소에서 브루셀라 감염률이 일반농장보다 2배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자 농림부가 이들이 취급하는 송아지구입시 어미 소에 대한 감염여부 확인 등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농림부에 따르면 올 3/4분기 739명의 소 수집상·중개상 사육소에 대한 검사결과 농장감염률이 4.6%로 일반농장 감염률 2.2%(8월 누계기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수집상·중개상이 사육하는 소가 브루셀라병 감염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을 통해 송아지를 구입할 경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특히 송아지를 구입할

경우 브루셀라병에 대한 어미소 검사실사와 감염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구입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농어민신문 10월 26일자)

음식점원산지표시 '파란불'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시행이 여당의 강한 추진결정에 힘입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식육의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법제화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소관부처인 국회 보건복지위의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상태. 하지만 단속실효성과 통상미찰을 이유로 법안 개정을 반대하던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최근 기류가 크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14일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농림부 축산국장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법안 보고 자리에서 이 법안개정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결정했다는 것. 게다가 소비자단체들이 음식점에서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개정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복지위 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여론공감에 따른 개정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어민신문 10월 27일자)